



정세분석 및 전망



최고의 적기를 맞은 농협 개혁, 국회통과 여부는?

- 서울대 김완배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문가, 농민단체, 조합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농협 개혁위가 12월 닷을 올린 후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혁과제를 도출했다.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16일 농협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했다.
- 그동안 농협개혁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왔지만 번번이 실패한데다 농협 개혁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신경분리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. 이번 개혁안이 여느 때보다 큰 흐름을 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. 진정한 농협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.
- 그러나 조합장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. 정부 주도의 입법예고안이 협동조합의 운동체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제외한 개혁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.
- ▲조합 선택권 확대 ▲조합장 비상임화 ▲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가장 큰 쟁점으로

꼽히고 있다. 농민단체와 협동조합연구소가 진행중인 '농협개혁을 위한 농업인 전국 순회 토론회'에서도 조합장들과 대의원·이감사들이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.

- 그렇지만 현재 중앙회장 인사권 남용과 이를 견제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, 선출직 조합장이 조합을 지배하고 조합장들이 권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현장의 여론은 개혁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세다. 이는 반대 의견보다 더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농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경우 흐름을 바꾸어 내 놓을 수 있다는 국회를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 개혁이라는 큰 방향이 일부 이견으로 인해 좌초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공통인식은 분명해 보인다. 국회에서 입법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농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.



저탄소,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계 변화



-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축으로 육성하겠다고며, 관련 핵심전략을 발표했다.
- 구체적으로 △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△농식품산업의 저탄소 환경친화형 산업화 △녹색 농어촌공간 조성 △녹색 식생활문화 형성 △기후변화 적응 △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, 제도 개선 등 6대 핵심전략이 그것이다.
- 본래 농림수산 분야는 산림과 해조류를 통해 유일하게 탄소 흡수원을 제공하는 친환경 산업이며, 실제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.3%에 해당되는 연간 3,7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. 또한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보충해 나갈 바이오매스 자원의 경우 85%를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제공하고 있다.
- 6대 핵심전략의 세부 추진방향으로 가축분뇨 활용 공동지원화 시설을 늘리고, 가축분뇨 메탄가스 에너지화 시설을 2012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한다. 지역별로 바이오매스 종합활용센터도 조성되고, 곤충 자원을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으로 육성한다.
- 농업부문 온실가스 통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친환경농업 생산 비중이 확대된다. 친환경 주택단지 시범지구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가 도입되고, 산림녹화에



준하는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한다.

- 이러한 계획을 갖고, 농식품부는 정책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, 이달 중에 제2차 녹색성장대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적인 종합대책을 만들고, 곧바로 추진계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.
- 이에 따라 화학비료 지원이나 농업·농촌의 어메니티 유지, 전국민적 농업 마인드 제고를 위한 농식품부의 농업인에 대한 정책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

쌀 관세화 유예에 대한 조기 관세화 논의 급물살

-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(UR) 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 조치를 인정 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추가로 연장했다.

- 그 대신 일종의 의무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(MMA) 물량으로 2005년 22만 6천t을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, 매년 이 물량이 증가해 2014년이면 40만 9천t으로 늘어난다.
- 이와 같은 조치는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함으로써 우리 쌀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였다. 대신 작년에만 쌀 28만톤을 의무 수입해 대부분 혈값에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.
- 문제는 2007년 말부터 국제 쌀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데 있다. 지난 2003년 톤당 5백 달러 선이던 미국산 쌀은 지난해 8월에는 두 배인 천 달러를 넘어섰다. 이 때문에 미국산 쌀에 관세를 부과하면 80kg에 23만 원 선으로, 경기미 보다 30%나 비싸게 된다.
- 이렇게 되자 최근 정부는 쌀시장을 앞당겨 개방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,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.
- 농촌경제연구원은 DDA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진행된 협상 결과를 근거로 타결되더라도 쌀 관세화로 인한 위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. 작년 12월 나온 4차 협상 수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쌀이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46.7% 감축되지만 저율관세 수입물량(TRQ)은 3.5%만 증량되고, 쌀이 개도국 특별품목 대우를 받게 되면 관세도 감축되지 않고 TRQ도 증량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
- 여기에 각종 국제기구나 연구소 등이 국제 쌀가격이 톤당 40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점을 들어 쌀 조기 관세화가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. 국제 쌀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국산쌀과 가격 차이가 없어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마당에 굳이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.
- 최종적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2010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유예화를 유지했을 때보다 10년간 2천 76억~4천 52억원의 수입쌀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.
- 이에 대해 정부는 관세화를 앞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본격적으로 관련 토론회를 계속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.
-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쌀은 국가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농산물이고, 조기 관세화가 더 유리하지만 DDA 협상에 따라 단기적 득실은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.
- 한농연 또한 각종 보고서 및 관련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을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며, 토론회와 회원 의견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이다. ☺